

일자리 만들기 시리즈 · 4

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제도의 활용 방안

-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신규 고용창출의 저조임
 -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제약하에서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
-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인프라시설의 투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
 -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의 직접 고용유발 효과는 투자액 10억원당 11.7명으로 분석됨
- 특히, 인프라시설 건설에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부는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창출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
 - 정부의 SOC 예산 중 1조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킬 경우 3.3조원의 투자효과(2.3조 증액효과) 발생
 -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3만 8천명(2만 7천명 추가 고용창출효과)

1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필요

- 사회복지 개선, 과학기술(R&D), 정보화 등 정부 예산이 증대되어야 할 부문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임
-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임
 - 전통적으로 인프라 시설의 적기 공급은 정부의 고유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편,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소요라는 특성을 가진 인프라시설의 건설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큼
- 따라서, 인프라시설의 공급을 통한 경제내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할 경우 고용에 대한 레버리지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함

2.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고용유발효과

-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직접 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제도하에서 추진된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11개 사업들의 실적치를 이용하였음
 - 각 사업의 총사업비 항목 중 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, 감리비 등의 투자비 항목과 품셈상의 적용 노임을 감안하여 실제 유발된 고용효과를 도출

<표 1>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(11개)의 직접 고용유발효과

(단위: 억원, 명/10억원)

구 분	도로 분야 (4개 사업)	항만 분야 (3개 사업)	경전철 분야 (2개 사업)	환경시설 분야 (2개 사업)
총사업비	63,234	19,219	14,712	1,470
직접 고용효과	13.20	9.03	11.70	12.85

-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들의 실적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의 직접 고용유발효과는 10억원당 11.695명으로 나타났음
 - 즉, 총 9조 8,635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유발된 직접 고용효과는 11만 5,353.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
- 상기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를 기초로 향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해 유발되는 신규 고용인원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음
 - 예를 들어, 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일자리는 1만 1,700개로 예상할 수 있음

3. 민간투자제도의 고용 레버리지효과

- 2004년 정부의 예산(안)을 보면,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필두로 하여 SOC부문에 총 17조 3,007억원이 책정되어 있음
 - 주요 부문별로 보면, 도로부문에 8조 1,146억원, 철도부문에 3조 1,742억원, 항만부문에 1조 6,756억원 등임
 - 이 중 민간투자제도와 관련된 5개 부문에 대한 예산, 즉 14조 1,936억원이 전액 재정으로 집행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고용인원은 16만 5,994명에 이를 것임

<표 2> 2004년 정부예산(안)

(단위: 억원)

구 분	도 로	철 도	항 만	지하철	공 항
2004년 예산	81,146	31,742	16,756	8,675	3,617

-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하여 인프라시설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민간부문과 분담할 경우, 정부의 예산으로 총투자비의 30%에 해당하는 4조 2,581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민간이 총투자비의 70%에 해당하는 나머지 9조 9,355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함

- 이 경우 정부는 기존 예산의 30%만 투입하여도 민간투자사업의 레버리지효과로 인한 추가 고용유발인원인 11만 6,195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음

<표 3> 예산 투입비율에 따른 고용 레버리지효과 비교

구 분	투입 예산비율 = 30%	투입 예산비율 = 40%	투입 예산비율 = 50%
투입 예산액	4조 2,581억원	5조 6,774억원	7조 968억원
예산 투입액에 따른 고용유발인원	49,798명	66,397명	82,997명
민간투자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고용유발인원	116,195명	99,597명	82,997명

4.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 필요

- 인프라시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산업 평균인 10억원당 12.4명을 상회하는 17.9명(직·간접 고용유발효과 포함)으로써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큼
-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 부담을 민간투자제도의 추진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이 분담하게 될 경우 고용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
 - 정부의 SOC 예산 중 1조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킬 경우 3.3조원의 투자효과(2.3조 증액효과)와 더불어 3만 8천명(2만 7천명 추가 고용창출효과)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음

국토연구원 윤하중 연구위원 (hjyoon@krihs.re.kr, 031-380-0661)
국토연구원 김난주 연구원 (njkim@krihs.re.kr, 031-380-0677)